

# 리우환경회의와 에너지 혼안과제 —기후변화협약과 CO<sub>2</sub> 문제—

이 자료는 한국에너지 공학회가 지난 7월 30일  
한국전력강당에서 개최한 창립기념 학술강연회  
에서 행한 강연내용을 옮긴 것이다. <편집자 註>

박 원 훈  
<한국과학기술원 연구단장>

## I. 리우환경회의 개요와 그 의미

- 우리나라로 鄭元植 국무총리가 국가 대표로 참석하였던 리우데자네이루 환경정상회의는 여려면에서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그 개요를 소개하고 리우환경회의가 주는 의미를 우선 읊미해 보고자 한다.

### 1. UN환경개발회의 (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 지난 6월 3일부터 14일까지 115개국의 국가 정상급을 포함하여 총 183개국이 참석했던 UNCED의 주제는 「환경이 지탱 할 수 있는 개발」(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이였다.
- UNCED에서 토의를 거쳐 채택된 것은 리우선언, 의제 21 (Agenda 21), 산림원칙에 대한 성명서였고, 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 협약은 과거 2년 여간의 준비회의를 거쳐 합의된 것을 각국 대표가 서명하는 공식 절차만을 밟았을 뿐이다. 에너지 문제와 직결되는 기후변화 협약은 다음에 별도로 상술키로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먼저 개괄코자 한다.

### (1) 리우선언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 UNCED 준비 초기에는 지구헌장(Earth Charter)로 계획되어 오다가 협상과정 중에 남과 북의 의견 대립으로 리우선언으로 그 내용이 약화되어 축소 조정된 것이다.

- 리우선언은 전문과 2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추구하는데 있어서의 기본 강령과 향후 국제환경협약시 철학적 기본지침이 된다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각국의 개발권 인정 / 타국의 피해제한 행사
- 지구환경 악화에 대한 차등적 책임 인정
- 개도국 및 환경취약국의 특수상황 고려
- 환경규제에 의한 일방적 무역 장벽화 제한
- 환경위해 행위 및 긴급사태시 사전통고
- 유해 폐기물 및 독성물질의 불법교역 금지
- 각국의 환경관련 국내 법 제정 의무화

### (2) 의제 21 (Agenda 21)

- 의제 21은 21세기를 향한 실천계획 또는 행동계획 수립의 지침서이다. 그러므로 리우선언이 모법이라면 의제 21은 그 시행령이라고 할 수 있다. 의제 21은 전문과 4부에 걸쳐 총 40장으로 구성되

어 있다.

- 전문 (제1장)
  - 제1부 사회·경제적 차원(제2~8장)
  - 제2부 개발을 위한 자원보전관리(제9~22장)
  - 제3부 주요그룹의 역할 강화(제23~32장)
  - 제4부 이행 방안(제33~40장)
- 제1부에서는 빙곤, 인구증가, 인간정주, 보건등 사회경제적 차원의 문제가, 제2부에서는 대기, 토지이용, 내수차원, 해양, 산림, 생물다양성, 생명공학기술, 폐기물과 유해물질, 방사선 물질등을 망라한 과학기술적 문제, 제3부에서는 여성, 근로자, NGO, 아동, 산업인, 과학기술자, 정책입안자등 환경운동 주체자의 역할문제, 제4부에서는 재원과 지원기구, 기술이전, 과학과 교육훈련, 국제협력, 법적제도, 정보등의 실천수단문제가 다루어졌다. 이들 내용에서 UNCED는 환경만을 위한 회의가 아니라 환경을 앞세운 국제질서 전반에 걸친 UN 회의였음을 알 수 있다.

### (3) 산림원칙에 대한 성명서 (Statement on Forest Principle)

- 산림의정서의 채택이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오다가 말레이시아를 중심한 열대우림국들의 반대 입장에 봉착하여 구속력이 없는 산림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원칙설정에 대한 성명서만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산림의 지속적 보전/관리/개발비용을 공동부담
  - 산림개발의 주권인정과 지속적 개발의 의무화
  - 산림자원의 중요성 인식 제고
  - 선진국의 산림보전과 재생에 대한 노력 경주
  - 산림에서 얻는 생물자원/유전재료의 소유권 및 생명공학기술과 이익의 공유권 인정

〈표-1〉 환경주의 패러다임의 전개과정

패러다임	개척 경제	환경 보호	자원 관리	생태 경제	생태지상주의
인간과 자연의 관계	+++ 인간중심주의	++ 인간중심주의	인간중심주의	생태중심주의	생물중심주의
상장적 주제		환경영향평가	지속 가능한 개발 오염자부담	오염예방	에코토피아
경제 이론	신고전주의 마르크스주의	환경과 외부 효과	(환경경제학)	(생태경제학)	?
환경 기술	대량생산기술	← 사후처리기술 →	← 청정기술 →		유기농법

- 원목벌채 제한에 의한 재정적 손실과 보전비용 보상

- 산림을 위협하는 대기오염물질의 규제

### (4) 생물학적 다양성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1987년 이후 UNEP 주관으로 과거 2년간 5차례에 걸친 국가간 협상회의에서 협약을 채택하고 UNCED에서는 지난 6월6일부터 서명을 시작하였으며 한국은 6월 13일 154번째로 서명국이 되었다. 미국은 서명을 거부하였다.
- 이 협약은 전문과 42개 조항, 2개 부속서로 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동정과 모니터링
  - 현지내 및 현지외 보전
  - 생물학적 다양성의 구성성분의 지속적 이용
  - 영향평가 및 부작용 최소화
  - 유전자원에의 접근과 기술에의 접근 및 이전
  - 생명공학의 취급과 이익배분
  - 재원 및 재정기구 설정

## 2. 리우환경회의의 의미

### (1) 환경가치관의 대전환

- 환경과 개발의 대립에서 공존으로 -

- 과거 30년간 환경주의(Environmentalism)의 발전은 〈표-1〉처럼 환경우선의 방향으로 전개되어 오존층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1985)과 몬트리올의정서(1987),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과 처분 규제에 관한 바젤협약(1989), 멸종위기의 위험이 있는 생물종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약(CITES, 1973)등이 있었으나 이번의 리우환경회의는 처음으로 단순한 환경만의 문제가 아닌 정치, 사회, 경제적 문제로 정리하고 「환경이 지탱할 수 있는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새로운 목표로 설정하였다.

- 한편 한국은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하여 금년이 30주년이 되는 해로서 이같은 지구환경운동의 발전사와 비교할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 (2) 신국제질서로의 이행

– 동서에서 남북의 문제로 –

- 산업혁명 이후 자원의 제한성을 무시한 대량 생산 기술로 자연을 파괴하고 이를 유도한 무절제한 경제성장과 대량소비를 미화시킨 개척경제(Frontier Economics) 정신이 환경오염을 누적시켰다. 이의 과오를 인정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후반부터이며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풍요한 삶을 영위하는 선진국(북)이 환경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 그러나 수준 이하의 삶 밖에 없는 제3세대(남)등은 빈곤속에 허덕이고 있음으로 환경이전의 생존문제가 선결과제로 「개척경제」를 추구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지구환경오염의 역사적 책임이 있는 「북」이 비록 정의로운 명제이기는 하나 「남」에 환경보전을 의무화 하려 할때, 「남」은 전과자인 「북」에 기술지원과 재정부담을 요구하는 것이다.
- 이것이 냉전의 종식과 함께 찾아온 신국제질서로의 이행에서 환경주의의 원칙에는 찬동하나 그 실천방안과 전략에 있어서는 남과 북이 소위 환경이데올로기로 대립되는 이유이다.

## 3. 환경과 무역규제의 연계

–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그린라우드(GR)로 –

- 국제환경규제의 강화가 자유무역정신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일반조항이 선언되기는 했으나 실익을 위해 힘으로 좌우되는 국제질서라는 원초적 사실을 부인할 수 없으며 환경을 무기로 한 무역규제(Green Round)는 명약관화하다.
- 우리는 이의 예를 오존층보호를 위한 일반 선언인 비엔나협약(1985), 그리고 오존층과의 물질규제의 시행을 규정한 부속 몬트리올의정서(1987)의 예에서 잘 알고 있다.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 협약 등도 곧 부속의정서의 협의, 채택으로 규제

가 뒤따를 것이고, 그 시기는 지금의 예상보다 더 빨라질 것으로 본다.

## 4. 기술 패권의 재확인

- 리우환경회의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은 기술이 전과 재정분담이다. 재정은 금전적 부담이라는 단순한 내용이나 기술이전 문제에 있어서 양보가 없고 또 기술력을 바탕으로 환경외교가 이루어져 기술패권주의가 다시 한번 확인되는 기회가 되었다.
- 美國이 국내 생명공학산업을 보호하고 기술이전을 기피하기 위하여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서명을 하지 않으면서도 CFC의 생산, 사용을 1996년부터 전면 금지한다고 몬트리올의정서의 일정보다 5년 앞당겨 독자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CFC 대체 기술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 기후변화협약도 CO<sub>2</sub> 가스의 배출을 1990년도 수준으로 2000년까지 규제한다는 다른 선진국들의 주장을 美國은 반대하여 2000년까지라는 시한을 삭제하여 채택하기에 이르렀으나, 美國이 자국내 기술현황을 정밀조사하여 확신이 서면 어느 때라도 시한설정에 동조할 것으로 예전된다. 이 모든 사실은 과학기술력이 환경외교력 즉 국력의 밑거름임을 입증하는 자료이다.

## 5. 韓國 환경위상의 재발견

- 리우환경회의가 특히 韓國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언론의 관심과 협조로 우리들 의식에도 큰 변화가 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남비」현상이 아닌 「냄비」현상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한바 이는 정부만의 책임은 물론 아니다.
- 리우환경회의는 국가대표들간의 UNCED, NGO들의 Global Forum, 의회 및 정신지도자들의 회의, 그리고 환경기술 박람회의 4개의 행사가 동시에 열렸는데 의의가 있다. 이는 환경운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주체는 民이며, 정부는 이의 수행자, 그리고 그 수행수단인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산업계에 있음을 시사한다고 본다.
- 이런 전제하에서 보면 환경오염의 실상과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한국의 환경위상은 경험미숙과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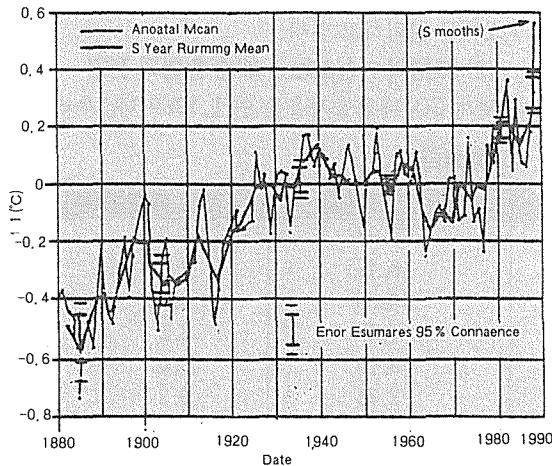
술부족으로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종진국으로서 발전의 가능성도 재발견하였다고 본다.

## II. 지구온난화와 CO<sub>2</sub> 배출현황

### 1. 지구온난화 현상

- 지구대기의 평균기온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현상으로서 그 증가가 계속 축적되고 있다.
  - 지구 연평균 기온 과거 100년간 0.5도 상승
  - 과거 140년간의 연평균 기온 중 상위 6년이 1980년대 이후에 출현  
(최고기온 순으로 1990, 1988, 1983, 1987, 1944, 1989, 1981)
  - 지구의 1990년 연평균기온은 기온 측정 아래 최고치

지구 연평균 온도 변화 추이(1856-1990)



〈註〉 영점은 1951년부터 30년간의 평균치

-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온실효과가스의 농도 증가 때문이라는 것이 정설로 굳어지고 있다. 물론 과학적 서물레이션에 의한 증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태양 흑점 활동설, 화산활동설, 간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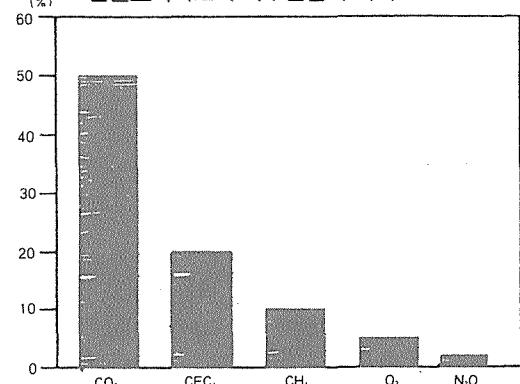
- 한반도 기후 변화(1931년 이후 30년 평균 기온비교, 기상청 자료)

	강릉	서울	울릉도	추풍령	대구	울산	광주	부산	제주	전국
1931-60	12.1	11.1	12.0	11.5	12.6	12.8	12.8	13.4	14.7	12.6
1961-90	12.5	11.8	12.0	11.5	13.2	13.5	13.2	13.6	15.3	13.0
차이	+0.4	+0.7	0.0	0.0	+0.6	+0.7	+0.4	+0.2	+0.6	+0.4

기설 같은 학설이 없는 것은 아니다.

- 온실효과 가스의 지구온난화 기여도(1950-1985년)는 다음 그림과 같다.

온실효과가스의 지구온난화 기여도 (%)



- CFC<sub>1</sub> 온실효과에 20%정도 기여하는 물질이나, 비엔나 협약(1985년), 몬트리올의정서(1987년)의 제정으로 오존 파괴의 주범으로 밝혀진 CFC<sub>1</sub>의 사용이 1999년까지 금지 될 예정이어서 기후 협약에서는 주요 논의의 대상이 아니며, 메탄(CH<sub>4</sub>)과 아산화질소(N<sub>2</sub>O)는 자연배출원이 많아 인위적으로 억제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지구온난화에 50% 이상 기여하는 이산화탄소(CO<sub>2</sub>) 가스의 배출량조절이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동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예측과 대응전략을 강구하기 위한 연구조직으로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를 1988년에 설립하였는데 1990년 8월의 1차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소개 한다.

- 전지구 평균 기온상승 10년당 0.3도(불확실 범위 0.2-0.5도) 예상
- 2025년까지 1도, 다음 세기 말까지 3도 상승 예상

(참고) 1960-1990년 30년간 서울 제주도의 연평균 온도차 3.6도

## • 온실가스 농도의 증가추세

산업혁명전	농도		증가율(매년)	증가율
	1990년	세		
이산화탄소( $\text{CO}_2$ )	275 ppm	354 ppm	0.5 %	31.6 %
메탄( $\text{CH}_4$ )	0.75 ppm	170 ppm	0.9 %	127 %
CFC 12	0	440 ppt	5 %	-
CFC 11	0	260 ppt	5 %	-
아산화질소( $\text{N}_2\text{O}$ )	228 ppb	310 ppb	0.25 %	36.0 %
오존( $\text{O}_3$ )	15 ppb	35 ppb	1 %	13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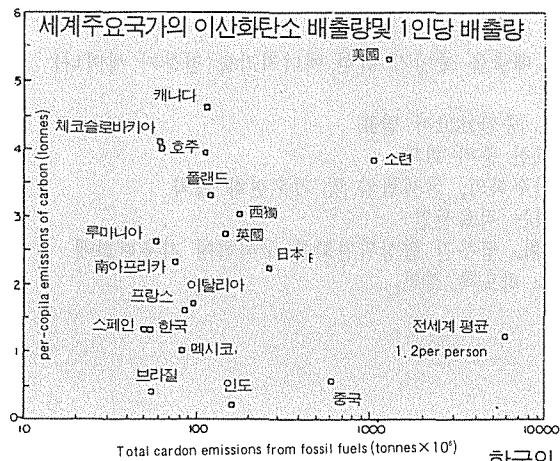
- 고위도 지방의 기온 상승이 더욱 현저할 것임.
- 현재의 수준으로 온실가스의 농도를 안정시키려면 이산화탄소 배출량 60%, 메탄 15-20% 삭감 필요성
- 육지의 기온상승은 해양 온도 상승보다 높을 것임.
- 2030년까지 해수면 20cm, 다음 세기 말까지 65 cm 상승 예상
- 해수면 상승은 지역적 차이가 클 것임.
- 저지대와 섬나라의 주거 불가능 가능성

## 2. $\text{CO}_2$ 배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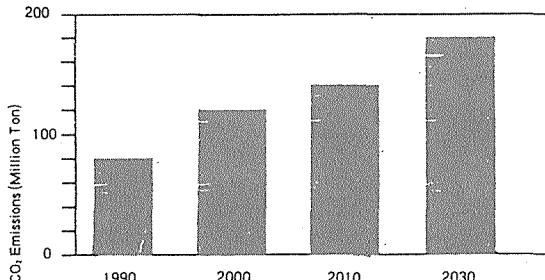
- (1) 각국의  $\text{CO}_2$  배출량
- 주요국가의  $\text{CO}_2$  배출량은 다음 표와 그림을 참고하기 바란다.
  - 세계 주요 국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1인당 배출량
  - 이산화탄소 배출총량은 美國, 소련, 中國, 日本의 순이며 1인당 배출량은 北美(美國, 캐나다), 구소련, 독일의 순이다. 한국의 1인당 배출량은 탄소환산 1.42톤(1990년 기준)으로 이미 세계 평균치 1.2톤을 상회하고 있다.
  - 韓國의 이산화탄소 배출 현황과 전망
  - 전세계  $\text{CO}_2$  배출증가율은 연 1.7%이나, 우리나라

세계 주요국가의  $\text{CO}_2$  배출량

	총배출량(백만톤, 탄소 환산)	비율(%)	1인당 배출량(톤)
미국	1,310.2	22.23	5.3
소련	1,086.2	18.43	3.8
중국	609.9	10.35	0.56
일본	269.8	4.58	2.2
서독	182.7	3.10	3.0
인도	163.8	2.78	0.2
영국	152.5	2.59	2.7
폴란드	125.3	2.13	3.3
캐나다	119.4	2.03	4.6
이탈리아	98.1	1.66	1.7
동독	89.3	1.52	5.4
프랑스	87.3	1.48	1.6
멕시코	83.7	1.42	1.0
남아프리카	77.5	1.32	2.3
체코	64.7	1.08	4.1
루마니아	60.2	1.02	2.6
한국	55.8	0.95	1.3
브라질	55.2	0.94	0.4
스페인	51.5	0.87	1.3
전세계	5,893	100	1.2



라는 연 3.0%로서 2020년에는 현재의 G7 국가의 평균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의 CO<sub>2</sub> 배출 현황

	1990	2000	2010	2030
배출량(백만톤)	63.5	109.2	135.2	191.4
1인당 배출량(톤)	1.46	2.37	2.74	3.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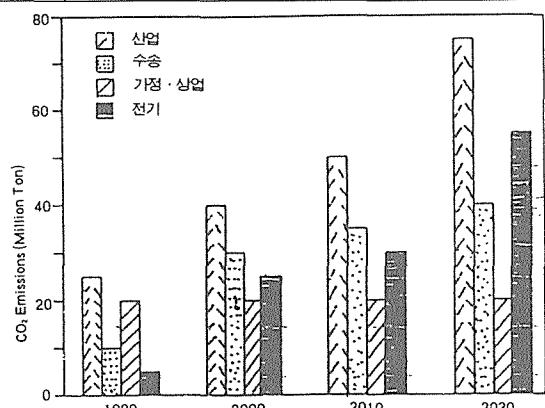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오진규 박사

○ 산업부문별 배출 전망은 다음 표와 같은 바

부문 및 발전부문의 CO<sub>2</sub> 배출량 급증이 예상된다.

### 산업부문별 CO<sub>2</sub> 배출전망

	1990	2000	2010	2030
산업	36.9	35.4	36.9	38.9
수송	17.9	24.1	24.7	20.5
가정·상업	29.0	17.1	15.1	11.3
발전	16.1	23.4	23.3	29.3



## III. 기후변화협약과 당면 에너지과제

### 1. 기후변화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1) 기후협상회의 연혁

장소	회의명 또는 주요내용
1985. 11 오스트리아 필라하	온실효과 가스의 기후변화, 영향평가
1987. 9 오스트리아 필라하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평가 및 영향
1987. 11 이탈리아 벨라지오	평가
1988. 6 캐나다 토론토	변화하는 대기에 대한 세계회의
1988. 11 독일 함부르크	기후와 개발 국제 회의
1989. 2 스위스 제네바	IPCC 1차회의

1989. 6	케냐 나이로비	IPCC 2차회의
1989. 4	프랑스 파리	온실효과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기술(전문가 세미나)
1990. 2	美國 워싱톤	IPCC 3차회의
1990. 8	스웨덴 산즈발	IPCC 4차회의, 중간보고서 발표
1990. 9	스위스 제네바	기후협상에 대한 준비 회의
1990. 11	스위스 제네바	제2차 세계 기후회의, 국제협약 및 기후변화 협약 제정을 촉구하는 각료선언
1990. 12	美國 뉴욕	제45차 UN 총회, 정부간 협상위원회를 구성하여 기후변화에 대하여 협상을 하도록 결의
1991. 2	美國 워싱톤	INC 1차회의
1991. 6	스위스 제네바	INC 2차회의
1991. 9	케냐 나이로비	INC 3차회의
1991. 12	스위스 제네바	INC 4차회의
1991. 2	미국 뉴욕	INC 5차회의
1991. 6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UN 환경개발회의(기후변화협약 서명)

## (2) 기후변화협약 개요

- 지난 2년간 5회에 걸친 정부간 협상회의를 걸쳐 최종 합의안이 채택되었고 이번 UNCED에서는 지난 6월 5일부터 서명이 시작되어 한국도 6월 13일 152번째 국가로 서명하였다.
- 기후변화협약은 전문과 26개 조항, 2개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구온난화 현상을 유발하는 온

실효과 가스를 안정화 시킴으로서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협약전문

-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개도국의 온실가스 배출증가 인정
- 각국의 차별적 책임/능력에 따른 온난화 방지

## 주요협상내용 및 결과

개 도 국	선 지 국	결 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선진국만이 즉각 즉각동결	CO <sub>2</sub> 배출을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감축 <sup>1)</sup>
재정지원	새로운 재정지원 기구 및 기금	ODA, CEF, IDA등 기존 국제 기구, 기금의 증액
기술이전	비상업적, 특혜조건	상업적 조건
		선진국은 2000년까지 90년 수준으로 동결노력 <sup>2)</sup> 기존기구의 확대 및 민주적 운영 기술이전으로 촉진노력

주 : 1) 미국 : CO<sub>2</sub> 뿐만 아니라 모든 온난화가스를 규제대상에 포함할 것과 특정연도까지의 규제목표설정에 반대  
2) 선진국은 OECD 회원국 및 동구권 국가를 포함

## 선 · 후진국의 의무조항

적용대상	일 반 의 무	특 수 의 무
통계작성 및 제출의무 국가 전략추진	협약가입국 -CFC를 제외한 온실가스의 인위적 배출규모 및 제거량 -온난화방지 및 적응력 제고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실천 공표	협약가입국중 OECD 회원국 및 동구권 국가의 추가 의무 -정책효과의 보고
협력사항	-온실가스 저감기술 및 공정의 개발 -온실가스 흡수원관리, 보호 및 증진 -적응능력 개발을 위한 계획 수립 -국가정책에 기후변화문제 포함 -협약발효후 3년이내	
보고의무		-협약발효후 6개월 이내

## 협력

- 화석연료 과다 의존국의 특별한 어려움 인정
- 주요내용
  - 국가별 배출 및 흡수량의 주기적 공표
  - 온실가스 저감/대체기술이전과 재정지원
  - 특수지역/특수입장 국가에 대한 고려
  - 기후변화 방지 목적으로 무역규제 방지
  - 선진국은 CO<sub>2</sub> 배출량을 1990년도 수준으로 제한
  - 1990년도 이후 취해진 온실가스 흡수량을 증가시킨 국가는 동량의 가스 배출량 크레디트 인정

## (3) 주요협상내용 및 의무조항

- 각국은 경제수준, 자원 및 기술보유여부, 지구온난화가 미치는 파급효과에 따라 온실가스가 미치는 파급효과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시기 및 감축규모,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 등에 관하여 청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 (4) 향후전망

-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美國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상당히 완화된 협약만을 받아들였으나 조만간 개시될 의정서협의에서는 본래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참고로 OECD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은 다음 표와 같다.

호주	온난화가스	계획 내용	기준년도	목표년도	비고
오스트리아	NMP GHG	안정화 20% 감축	1988 1988	2000 2005	감정목표(다른 나라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경우)
캐나다	CO <sub>2</sub>	20% 감축	1988	2005	국회 계류중
캐나다	CO <sub>2</sub> 와 다른 GHG	안정화	1990	2000	CFCs는 97년, 메틸클로로로름은 2000년, 기타물질 2005년까지 사용금지
덴마크	CO <sub>2</sub>	20% 감축	1988	2005	실행계획
프랑스	CO <sub>2</sub>	안정화	1990	2000	년간 1인당 2톤 기준
독일	CO <sub>2</sub>	25% 감축	1987	2005	
이탈리아	CO <sub>2</sub>	안정화 20% 감축	1988 1988	2000 2005	구속력은 없는 계획
일본	CO <sub>2</sub>	안정화	1990	2000	1인당 기준
네덜란드	CO <sub>2</sub>	안정화 2-5% 감축	89/90 89/90	1995 2000	단독으로 시행중
영국	ALL GHG	20-25% 감축	89/90	2000	단독으로 시행 중
미국	CO <sub>2</sub>	안정화	1990	2000	2005년에 GWP 20% 감축 (1990년 기준)
E	ALL GHG	안정화	1990	2000	CFCs는 이미 안전화
C	CO <sub>2</sub>	안정화	1990	2000	공동체 전체의 목표

NMP : Non-Montreal Protocol

GWP : Global Warming Potential

- 지구협약 의정서관련 협상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 온난화가스의 규제시기 및 감축량
  - 각국의 책임감축량 분배
  -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규제
  - 탄소세와 오염권 판매제도의 범세계적인 도입 여부
- 참고로 지금까지 논의된 CO<sub>2</sub> 배출규제안을 요약 소개한다.

## - 탄소세(또는 Energy Tax)부과 (EC 국가)

- 화석 연료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EC에서 1993년부터 실시키로 결정된 안으로 2000년 까지 원유 배출당 10달러까지 부과하기로 결정

## - Emissions Right Trading

- 각국의 배출량을 할당하고 허가량을 거래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서 할당량을 정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음.

- 개도국의 이산화탄소의 배출 증가율을 3%이하

## 로 억제하는 방안

- 선진국에서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감축하는 대신 개도국에서는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해 어느 정도의 배출 증기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안
- 1인당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2톤 이하로 정하는 안(프랑스 제안)
- 자국의 1인당 배출량이 2톤 이하인 점을 의식하여 발표한 안으로 원자력발전기술 및 설비를 수출하려는 의도

## 2. 당면 에너지 과제

### (1) 에너지 절약 목표의 설정

- 정부는 각 에너지 사용부문(예, 산업, 수송, 가정, 건설, 전기부문등)의 실현가능한 에너지 절약 목표를 설정하여 강력히 추진함
- 에너지 사용 효율 향상과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는 기업체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적극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함.

### (3) 연료의 전환

- 화석연료의 CO<sub>2</sub> 발생량 원단위

	CO <sub>2</sub> 원단위량(단위 : g/kcal)	비
석 탄	0.366	1.0
석 유	0.295	0.806
천연가스	0.211	0.577

- LNG 발전으로의 전환과 원자력 발전의 확대가 CO<sub>2</sub> 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확실한 방법이나 대국적인 견지에서 심층 분석되어야 할 것임.

### (4) 대체에너지 개발 및 사용 연구

- 대체에너지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적으나 에너지 총량적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
- 에너지 사용에 대한 우리의 선택의 여지를 넓혀주고 부차적으로 에너지 절약 홍보의 장점이 있으므로 장기적 안목에서 추진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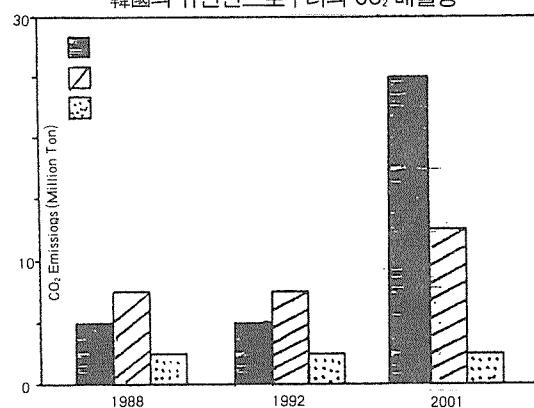
### (5) 발전 시스템의 향상

- 석탄을 발전 연료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효율이 높은 발전 시스템을 사용하여 단위 발전량당 CO<sub>2</sub> 배출을 감소 시킬 수 있음.

### (2)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특별관리

- 에너지를 다소비하는 발전, 제철, 시멘트 제조부문은 앞으로도 CO<sub>2</sub> 배출이 많은 화석연료, 그 중에서도 유연탄 의존 비중이 크므로 관리대책이 필요함.
- 韓國의 유연탄으로부터의 CO<sub>2</sub> 배출량 전망은 다음과 그림과 같다.

韓國의 유연탄으로부터의 CO<sub>2</sub> 배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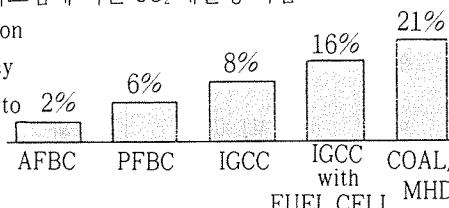


○ 발전시스템에 따른 CO<sub>2</sub> 배출량 저감

Conversion

Efficiency

Relative to AFBC 2%



PC/FGD

10<sup>6</sup> Tons CO<sub>2</sub>/Yr -0.35

Relative to

PC/FGD

-0.47 -0.85 -1.03

\* PC/FGD : 미분탄 연소/배연가스 탈황

AFBC : 상압 유동층 보일러

PFBC : 가압 유동층 보일러

IGCC : 석탄가스화 복합 발전

MHD : Magnetohydrodynamics

## IV. 이산화탄소 연구개발 과제

### 1. 관련기술현황

#### (1) 흡수법

이산화탄소를 배기가스로 부터 분리하는 기술은 천연가스 처리, 암모니아 제조공정 등에서 이미 실용화 되어 있는 것이 있다. *Monoethanolamine*, *Sulfonol*, *Aminol* 등 흡수제에 이산화탄소를 흡수 시킨 후, 흡수제의 온도나 압력을 변화 시켜서 이산화탄소를 탈착시켜 회수하는 기술이다.

#### (2) 흡착법

흡수법과 더불어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흡착법이 있다. 흡착법을 이용한 이산화탄소 흡착 선택성이 높은 흡착제(*molecular sieve*, *zeolite*, 활성탄등)를 사용한다. 일본의 제철소에서 흡착법을 사용중인데 중소규모 시설의 적용에 적합한다.

#### (3) 처분 저장기술

회수된 이산화탄소는 심해에 저장하는 방법과 천연가스나 기름 폐광에 처분하는 방법이 부각되고 있다. 심해에 처분하는 방법은 이산화탄소를 고압에서 액화시킨 후 심해로 수송시키면 이산화탄소는 해저에 *pool*을 형성하여 오랜 기간 동안 안정한 성질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해양 순환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이산화탄소가 해수에 용해됨에 따른 해양 생태계에의 영향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은 관계로 아직 연구의 여지가 남아 있다. 유전에 저장하는 방법은 수십년 동안은 저장이 가능하나 대량의 장기 저장은 유전의 용량이 제한되어 단기적으로는 심해에 처분하는 것보다 경제적이지만 잠정적인 방법일 수 밖에 없다. 전문가들의 추산에 의하면 이산화탄소 90% 제거, 처분시 화력발전소의 발전 원가를 30~100% 상승 시켜서 실제로 이러한 기술을 적용하는데는 문제가 있다.

### 2. 국제 연구개발 동향

○ 이 분야 연구에 가장 활발한 나라는 日本으로서 1990년부터 통산성 산하 신에너지 산업기술총합개발기구(*New Energy and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Organization : NEDO*)의 총괄 아래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이 연구에 필요한 연구비는 에너지 특별회계(석유대책, 보조금)와 일반회계(*NEDO*의 출자금)로 충당하고 있으며, 지구환경산업기술연구기구(*Research Institute of Innovative*

### 日本의 이산화탄소 관련연구현황

항 목	연 구 소
1. 인공광합성에 의한 이산화탄소 고정화 (1) 금속담체를 촉매로 탄산가스 고정화 연구 (2) 이산화탄소 환원 반응 연구 (3) 신에너지 이용한 이산화탄소 리사이클 자원화 기술	화학기술연구소 공해 자원연구소 오사카 공업기술 실험소
2. 조류에 의한 이산화탄소 고정화 (1) 조류에 의한 이산화탄소 고정능력 연구 (2) 이산화탄소 실용 계측 연구 (3) 염조류의 광합성 기능 개발에 관한 연구	미생물공업기술연구소 계량연구소 화학기술연구소
3. 산호초 이산화탄소 고정에 관한 연구 (1) 산호초 이산화탄소 고정능력에 대한 연구 (2) 이산화탄소를 억제하는 해양생물공학에 관한 연구	지질조사소 전자기술종합연구소 공업자원연구소 전자기술종합연구소
4. 산업기원의 이산화탄소방출 저감기술 분석 모델의 구축	
5. 이산화탄소의 분리기술 연구 (1) 무기증상화합물 및 석탄계 흡착제를 이용한 이산화탄소의 회수에 관한 연구 (2) 순환유동층을 이용한 배가스중의 이산화탄소 흡수에 관한 연구	공해 자원연구소 분해도공업개발 실험소

*Technology for the Earth : RITE*)의 CO<sub>2</sub> 고정화 등 프로젝트실을 중심으로 산·학·연 공동연구 체계를 구축하여 40여개의 협력 업체와 국립연구소, 대학의 공동연구로 활발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1991년에 설립하였다. 참여국가는 美國, 캐나다, 日本, 스칸디나비아 4국, 네덜란드, 스페인, 이탈리아이며 독일, 스위스 및 기타 몇몇 국가들이 참여 할 예정이다.
- 日本공업기술원에서 현재 수행중인 이산화탄소 관련 연구를 소개하면 다음 표와 같다.

### 3. 새로운 기술들

#### (1) 이산화탄소 분리 기술

분리막을 이용한 탄산가스의 분리에 관한 연구는 시작 단계이며 가스의 투과율 차이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를 농축시킬 수 있다. 이 기술의 장점은 선택성이 좋은 막 소재를 개발하고 이를 모듈화하여 가압 연소 공정에 적용이 가능케 하는 것이다. 이미 이산화탄소 분리, 농축을 위한 막 소재에 대해서 특허가 등록된 것이 있고 외국 회사에서 고분자 막을 사용한 모듈을 발표한 바 있다.

#### (2) 이산화탄소 처분 기술

이산화탄소를 액화 시켜서 심해 및 유전에 처분하는 기술 이외에도 해수중 Ca<sup>+</sup>, Mg<sup>++</sup> 이온을 이용하여 이산화탄소를 고정화시키는 방법, 해양에 직접 흡수시키는 방법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이며 산호초 등 해양 생물을 이용하여 이산화탄소를 석회석으로 침전시키는 방법등이 연구되고 있다.

#### (3) 이산화탄소 식물 고정화기술

해양 또는 육상의 식물을 이용한 광합성을 통하여 이산화탄소를 고정시키는 기술이다. 해조류와 켈프 같은 대형 해조류, 갈조류, 플랑크톤 같은 미세 조류까지 연구대상이 되고 있으며 광화이버로 태양빛을 해저로 전달시켜 대량 생산 후 이를 사료로 이용하는 기술이 주목되고 있다. 육상의 경우는 식림이 기본 요소이지만 광합성 효율이 높은 식물을 유전자 조작 등 생물공학 기술로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실용화 까지는 앞으로도 30~50년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견된다.

#### (4) 인공광합성 기술

인공광합성이란 식물이 호흡에 의해서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광합성에 의해 유기물을 형성하는 사이클을 모방하여 산업체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인공적으로 고정화하여 탄소자원으로 재이용하는 구상이다. 광에너지를 이용하는 이산화탄소 고정화 방법은 광촉매를 이용하는 방법과 광전자를 이용하여 전기에너지로 변환 시킨 후 전기화학적으로 인공광합성을 시도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반도체 광촉매, 금속 콜로이드 촉매, 금속담체촉매등을 이용하여 이산화탄소의 광화학적 환원 반응을 이용하여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메탄올, 에탄올등이 합성되는 것이 확인 되었으나 아직 수율이 낮아서 혁신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 (5) 촉매 고정화/재이용 기술(새로운 C1화학)

회수되는 이산화탄소는 그양이 위낙 방대하여 처분, 저장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나 광합성 생성물을 재이용이 가능한 물질로 변환시켜서 연료나 화학원료로 재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현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분야로는 이산화탄소를 수소와 함께 촉매 반응을 일으켜서 메탄올을 합성하는 기술이다. 천연가스 개질화 반응이나 심야여유 전력을 이용하여 전기분해로 얻은 수소를 공급하며 반응을 시키면 되고 합성되는 메탄올은 연료로 사용하던지 다른 반응의 원료로 사용하여도 된다.

이산화탄소는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된 기체이어서 다른 유용한 물질로 변환시키기가 어려운 반면, 일산화탄소는 반응성이 있어서 소위 C1화학의 활발한 연구대상이 되어왔다. C1화학은 분자의 탄소수가 하나인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메탄올을 원료로 다른 유용한 물질로 변환시키려는 연구이다. 따라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촉매 반응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일산화탄소로 변환 시키면 일산화탄소는 유용한 물질로 변환이 비교적 용이하다. 일산화탄소를 변환시키는 기술을 촉매를 이용하는 화학적 방법과 세균등을 이용하는 생물적 방법이 있다. 화학적인 방법의 장점은 반응 속도가 빠르고 제품의 종

류가 다양하다는 것이고, 생물 공정의 장점은 반응이 상온, 상압에서 일어나므로 운전비용 및 장치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이다.

## V. 맷는 말

○ 에너지와 환경은 같은 동전의 앞과 뒤로서 환경보전의 최우선 과제는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이다. 특히 지구온난화 문제로 CO<sub>2</sub> 가스의 국가별 배출량 규제가 예견되고 있어 에너지 문제는 수급문제만 아니라 사용부분 문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것은 환경보전에 있어 동력자원부의 역할이 중요함을 의미하며 대체에너지개발사업 및 에너지절약 연구개발사업과 국가 환경 과학기술개발 10개년 계획과의 긴밀한 연계, 조정이 필요하다.

○ 에너지기술은 대형기술/복합기술로서 연구개발에 있어 막대한 투자와 장기간이 소요되는 특징이다. 따라서 에너지기술개발이 임기응변적 단기 계획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착오이다. 1970년대 두차례의 석유위기 때 활성화 되던 에너지 연구가 계속 추진되었다면 오늘에 와서 다시 들끓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모두가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한 CO<sub>2</sub> 배출규제 대응방안에 있어서는 우선 각 에너지 사용 부문별로 기존 기술로서 화석연료 감축 가능량과 CO<sub>2</sub> 배출저감량을 추가 비용과 함께 정밀조사할 필요가 있다. 경제성 검토에 따른 여러 대안이 제시될 수 있는데, 여기에 에너지공학적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확신한다.

## ■ 용어해설 ■

# 稅務查察

## 부정한 행위로 脱税혐의가 있는 사람대상 強制조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있는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제조사를 말한다. 조세범처벌법에 근거해 실시되기 때문에 「조세범칙조사」라고도 한다. 이조사로 세금탈루등 부정행위가 드러나면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벌과금이 부과되거나 고발조치되는 등 형사처벌이 가해진다.

일반세무조사나 부동산투기조사등 특별조사는 세금추징에 그치는데 반해 세무사찰은 형사처벌이 추가된다는 점에서 가장 강한 세무조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조사착수도 불시에 이루어지며 검찰로부터 특

별사법경찰권을 부여 받은 세무공무원들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필요한 장부나 증거서류를 확보, 조사를 실시한다.

지금까지 실시된 대표적인 세무사찰로는 明星 및 汶洋탈세 사건 조사 등을 꼽을 수 있다.

국세청은 조세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세무사찰 활성화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연도별 세무사찰실적을 보면 86년 8건, 87년 7건에 불과 했으나 88년에는 55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어 89년 18건, 90년 10건, 지난해는 7건으로 요즘들어 다시 줄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피땀흘려 이룬 경제 회복비로 무너진다.**